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21호

「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4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 이유

시민옴부즈만의 공정한 활동을 위하여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의 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시민옴부즈만의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를 정함(안 제8조의2).

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행정  
자치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cmdjyou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제척·기피·회피)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
2. 옴부즈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옴부즈만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옴부즈만이나 옴부즈만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8조의2(제척·기피·회피) ① <u>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u></li> <li><u>2. 옴부즈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</li> <li><u>3. 옴부즈만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u></li> <li><u>4. 옴부즈만이나 옴부즈만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u></li> </ol> <p>② <u>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③ <u>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【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발 의 의 원 명 단

연 번	발 의 의 원	서 명	비 고
1	박혜리	박혜리	
2	전문익	전문익	
3	함인호	함인호	
4	박재호	박재호	
5	송대원	송대원	
6	강동호	강동호	
7	박희재	박희재	
8	강민석	강민석	
9	김재서	김재서	
10	박상수	박상수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
16			
17			
18			
19			
20			